



주간통일정세 2008-50(2008.12.08~12.14)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 주간 통일정세

2008-50

##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 I. 북한동향

###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프랑스 의사, 김정일 치료한 적 없다고 주장(12/13, AP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 치료차 북한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프랑스의 뇌신경 전문의인 프랑수아-자비에 루 박사는 13일 AP통신과의 전화통화에서 김 위원장을 치료했다는 프랑스 언론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
  - 앞서 르 피가로 11일자에 따르면 루 박사는 “김 위원장은 뇌혈관 사고의 희생자이나 실제로 외과적 수술을 받지 않았으며 건강 상태가 좋아질 것”이라며 “요즘 공개되는 사진들은 진짜로 보인다. 그는 북한을 통치하고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고 보도, 또 르 피가로는 루 박사가 “진료에 관한 비밀과 나라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더이상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었음.
  - 그러나 루 박사는 이 신문의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자신은 김 위원장을 본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김 위원장의 건강과 관련한 정보를 하나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 루 박사는 지난 4월 몇몇 동료들과 최신 척추 수술법을 가르치기 위해, 10월에는 24시간에 걸쳐 신경외과 의료기관에 필요한 물품의 목록을 만들기 위해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다면서도 “다른 프랑스와 독일 의사들과 마찬가지로, 여러차례 방북했지만 지도자를 본 적은 없다”고 답변
  
- **김정일, 농장원들 편지에 ‘친필’ 보내(12/12, 조선중앙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황해북도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원들이 보낸 편지를 받고 자신의 “친필(서명)”을 보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2일 보도, 김 위원장은 미곡협동농장 농장원들이 지난달 25일자로 보낸 편지를 보고 “2008년 12월 10일 김정일”이라고 직접 쓴 “은정어린 친필”을 보냈다고 중앙방송은 날짜를 각각 명기해 보도
  - 농장원들의 편지와 그에 대한 김 위원장의 “친필” 공개는 그가 미곡협동농장과 사리원담공장, 사리원시내 ‘민속거리’ 등 사리원지역을 시찰했다는 조선중앙통신의 11일 오후 보도에 이어 나온 것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김 위원장의 존재를 확인시키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추정됨.
  
- **김정일, 사리원담공장·농장·민속촌 시찰(12/11,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최근 현대화 공사를 마친 황해북도 사리원담공장과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사리원시내의 ‘민속거리’(민속촌)를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이 11일 보도, 그러나 방송은 김 위원장의 시찰 날짜는 밝히지 않음.

- 김 위원장의 이번 시찰은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2일 김 위원장의 평양 중앙동물원 시찰을 보도한 이후 9일만임.
- 김 위원장의 이번 현지지도에는 최룡해 황해북도당 책임비서, 박남기 노동당 부장, 리재일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북한군 현철해, 리명수 대장이 수행

#### ● 김정일 뇌출혈, 수술은 안해(12/11, 르피가로)

- 지난 10월 김정일의 치료를 위해 북한을 방문했던 신경외과 전문의 프랑수아 자비에르 루(Roux)는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 인터뷰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뇌출혈 피해를 입었지만 수술은 받지 않았으며 상태가 호전되고 있는 중”이라고 밝힘.

#### 나. 정치 관련

#### ● 北, 美경제위기, 군사비 지출 때문(12/14, 노동신문; 우리민족끼리)

- 노동신문은 14일 ‘미국의 경제 해일의 화근은 무엇인가’ 제목의 글에서 최근 미국이 겪고 있는 경제위기는 ‘군사비 지출’ 때문이라고 주장
- 신문은 “미국은 막대한 전쟁비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금 증가, 아무런 담보도 없는 각종 채권발행, 다른 분야의 지출축소 등의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며 “이것은 미국의 예산적자 위기를 격화시키고 경제전반의 목을 조이고 있다”고 주장

#### ● 北, 南 ‘북한인권법안’, 독소조항 가득(12/13, 통일신보)

- 통일신보는 13일 ‘남잡이가 제잡이 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안’에 대해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법안이라고 비난
- 통일신보는 통일 후 인권침해자 처벌을 위한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를 명문화한 대목에 대해 “통일은 민족이 화해하고 단합하여 하나가 되는 일”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으며 북한인권대사 설치에 대해서도 “동족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라고 비난
- 신문은 대북전단지 살포 지원과 대북방송 원상복귀 조항과 관련, “한나라당이 반공화국 뼈라살포행위의 공범자이고 대결에 환장한 집단이라는 것을 여실히 알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런 동족대결의 악법이 만들어질 경우 북남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고 덧붙임.

#### ● 北, 6자회담 의장성명 보도(12/1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2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6차 6자회담 3차 수석 대표회의 소식을 전하면서 의장성명을 상세하게 보도, 통신은 “회담



참가국들은 9.19공동성명의 2단계 행동조치를 이행하는 데서 긍정적인 진전이 이룩된 데 대해 인정했다”며 “회담에서는 10.3합의에 명기된 대로 무력화(불능화)와 병행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에 대한 100만t의 중유에 해당하는 경제 및 에너지 보상을 완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

- 통신은 또 “참가국들은 6자합의에 따르는 자기의 의무 이행을 전면 거부한 일본 대신 국제 공동체가 경제보상 제공에 참가하는 것을 환영했다”며 “회담에서는 가까운 시일 내에 경제 및 에너지 협조 실무 그룹회의와 동북아시아 평화 및 안보체계 실무그룹회의 그리고 다음 번 6자회담을 각기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의장성명에 든 검증관련 대목은 언급하지 않음.

● **北, 美, 핵활동 이중기준 철폐해야(12/11, 민주조선; 우리민족끼리)**

- 민주조선은 9일자에서 ‘국제적 비난의 대상—미국의 부당한 핵 이중기준 정책’ 제목의 글에서 시리아의 민수용 핵개발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지원 방침에 미국이 반대하는 것을 지적, 평화적 핵활동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이중기준’ 철폐를 촉구

● **北, 평화목적 우주개발 권리 계속 행사(12/11, 평양방송)**

- 평양방송은 11일 우주를 평화적 목적으로 개발 이용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라는 보도물을 통해 “우주를 인류의 생존과 발전 번영을 위한 평화적 목적에 개발 이용하는 것은 현 시기 하나의 세계적 추세” 라면서 “세계 평화애호 인민들은 미·일의 위협천만한 우주군사화 책동에 경각심을 높이면서 평화적 목적의 우주개발 분야에서 자기의 권리를 계속 당당히 행사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
- 평양방송은 1월부터 10월까지만도 세계적으로 총 85개의 위성이 발사됐는데 그중 러시아가 35개, 인도가 12개, 중국이 10개를 쏘아올렸다면 이들 나라의 우주개발 노력을 ‘평화적 목적’이라고 규정하면서 미국과 일본에 대해선 “우주 군사화 책동”에 매진하고 있다고 비난

● **北, 핵무기 보유국 美보고서 관심 표명(12/1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0일 미국 국방부 산하 합동군사령부의 ‘2008 합동작전 환경평가보고서(The Joint Operation Environment 2008)’의 연례보고서가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명기한 사실을 짚막하게 보도, 통신은 이 보고서가 “아시아 대륙에 이미 5개의 핵무기 보유국들이 있다”면서 “중국, 인도, 파키스탄, 조선(북한), 러시아 등을 차례로 밝혔다”고 전언
- 통신은 “미국이 정부 보고서에서 조선을 핵무기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하고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의미를 설명



- **조선신보, 南 중재자 모습 사라져(12/10,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10일 ‘6자 단장회담, 허물어진 북남공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번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에서 한국의 입장을 과거 6자회담 때와 비교하는 가운데 북한과 미국간 “중재자”의 옛 모습은 더는 찾아볼 수 없다”며 이명박 정부의 “대북 대결노선이 다국간 외교의 전략까지도 대폭 전환시킨 듯 하다”고 주장
  - 조선신보는 한국 수석대표인 김 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검증의 정서와 경제지원간 연계를 천명한 것을 가리켜 “일본과 한패로 분류될 수 있다”고 불만을 드러냄.
  
- **北, 인권의 날에 北인권 제기 비난(12/1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0일 세계인권선언 60주년 기념일이자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판이한 인권기준이 가져온 인권 실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미국 등이 제기하는 ‘인권문제’란 “다른 나라들에 대한 내정 간섭과 정부 전복, 압살 책동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허구에 불과하다”고 주장
  
- **北,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해넘길 듯**
  - 북한이 당초 지난 8월이나 늦어도 11월에는 실시할 것으로 예상됐던 최고인민회의(우리의 국회) 제12기 대의원 선거가 사실상 내년으로 넘어갔음.
  - 북한은 2003년 8월3일 임기 5년인 최고인민회의 제11기 대의원 687명을 선출했기 때문에 지난 7, 8월에 차기 대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아직 선거시행 공고가 없어 올해 실시 가능성은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통상 선거 두달 전쯤 선거를 공고

다. 경제 관련

- **에스토니아, 北에 4만2천달러 식량지원(12/13, 자유아시아방송)**
  - 유럽연합(EU) 가맹국인 에스토니아가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용으로 세계식량계획(WFP)에 현금 50만 크룬(4만2천달러)을 기부했다고 에스토니아 외무부가 발표, 에스토니아 외무부 대변인은 “내년에도 북한에서 식량 사정이 악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870만명의 북한 주민이 긴급하게 식량지원을 필요로 해서 이번 지원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
  
- **北, 유엔기구에 소액대출사업 재개 요청(12/12, 자유아시아방송)**
  - 유엔의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이 지난 199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진행한 북한의 협동농장 주민을 위한 소액대출 지원사업을 북한 당국의 요청에 따라 2010년 이 사업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2일 보도



- 사업평가를 위해 지난주 방북한 IFAD의 북한담당자 가네쉬 다파씨는 “12년동안 북한의 9만900여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미화 50달러 미만의 소액대출을 지원해왔다”며 소액대출을 받은 협동농장을 가구들은 대출금으로 돼지나 씨감자를 구입해 “예전보다 나은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언급.
- 다파씨는 IFAD가 북한에서 소액대출 지원 사업이 성공적이라는 평가와 북한 당국의 요청에 따라 내년에 대북 사업전략을 준비해 2010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
- IFAD의 대북 소액대출 지원사업은 북한의 조선중앙은행에 자금을 지원하면 이 은행이 자체 자금을 더해 군 단위의 지방은행을 통해 선정된 협동농장과 주민들에게 대출해주고, 이 돈을 받은 농장과 주민들은 가축이나 영농기구를 마련해 농업생산을 향상시킨 후 잉여 가축이나 식량을 팔아 지방은행에 갚는 방식으로 운용됐었음.
- IFAD는 지난 12년간 북한의 잠업개발 사업(1996~2002), 축산복구 지원 사업(1997~2003), 산간지대 식량안보 사업(2001~2008) 등을 위해 모두 6천910만달러(약 933억원)를 10년 거치, 40년 상환에 수수료 0.75%의 조건으로 빌려줬음. IFAD는 북한에서 식량이 부족한 지역의 소득이 낮은 협동농장, 협동농장 내에서도 저소득 여성을 우선 지원하는 기준을 갖고 있으나 대출 대상자의 선정 과정은 전적으로 북한 당국이 했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가 힘들다고 다파씨는 설명, 다만 IFAD 직원이 정기적으로 북한을 방문하고, 세계식량계획(WFP)이나 식량농업기구(FAO)의 도움을 받아 감시 활동을 펴고 있다고 언급
- IFAD 외에도 호주의 마라나타 신탁회사가 2004년부터 북한 재무성과 합작으로 ‘조선-마라나타 은행’을 설립해 북한의 공장과 기업, 일반 주민에 자금을 대출하고 있으며, 미국의 소액대출 민간단체인 ‘키바(KIVA)’도 대북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으나 북한 당국과 합작없이 민간차원의 대출 사업은 어렵다는 판단 아래 북한 진출을 무기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RFA는 보도

● **北학교, 스위스지원으로 새건물 신축(12/11, 조선신보)**

- 2008년 홍수 때 완전히 폐허로 변했던 북한 강원도 법동군내 산골학교들이 스위스-베트남소규모대상재단의 후원으로 새 교사를 완공하고 정상 수업에 들어갔다고 조선신보가 11일 보도, 조선신보에 따르면 북한 교육분야를 후원하는 스위스의 스위스-베트남소규모대상재단은 지난 3월부터 작년 홍수에 완전히 침수된 법동군 비암중학교와 수침중학교의 새 교사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덕분에 이들 학교는 약 2천500㎡에 달하는 새 교사를 완공하고 임시건물에서 수업하던 학생들도 2학기부터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시작
- 조선교육후원기금의 채량일(64) 회장은 “스위스-베트남소규모대상재단과 조선교육후원기금은 법동군에서 자체 원천을 최대한 동원해



다리도 새로 건설하고 교구비품 보장과 난방시설 설치, 야외 보조건물 건설 등으로 교육환경을 완전히 일신시켰다”고 언급

- 스위스-베트남소규모대상재단은 앞으로도 조선교육후원기금과 협력하에 (북한의) 교육부문을 적극 후원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황해남도 여러 학교들에 대한 후원을 진행하겠다”고 발표

● 北류경호텔에 홍콩기업도 투자(12/11, 자유아시아방송)

- 16년만에 공사가 재개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 평양의 류경호텔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이 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
- 북한은 1987년 프랑스 기술과 자본으로 평양 보통강구역에 105층짜리 피라미드형 류경호텔을 짓기 시작했으나 1992년 외부 골조 등 60% 공정을 보인 상태에서 자금난으로 공사를 중단했다가 이집트 통신 회사인 오라스콧의 1억달러 투자로 지난 4월부터 공사를 재개한 것으로 알려짐. 이에 따라 공사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활발하게 진행중인 가운데 아랍에미리트연합의 국영부동산 개발회사인 ‘에마르’가 북한의 광산개발권을 대가로 이 호텔 공사에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데 이어 홍콩의 “유명한 기업체”도 류경호텔 건축 투자에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다고 RFA는 보도
- 이 방송에 따르면 홍콩의 유명 투자회사 고위 관계자는 홍콩의 유명한 기업체가 류경호텔의 재건축 투자에 뛰어들었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이 기업체의 대북 진출을 위한 교두보 성격인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
- 최근 외벽에 유리를 붙이는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류경호텔은 2011년까지 3개층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사무실과 국제회의장 등으로 활용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 北 유럽재보험사에 승소, ...7천억원 수령(12/11,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 북한이 영국 등 유럽 재보험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이겨 3천920만 유로, 한화로 약 700억원을 받게 됐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11일 보도
- 신문은 이날자 경제섹션 헤드라인 기사를 통해 런던고등법원 심리에서 영국 로이드를 비롯한 재보험사들이 북한 조선국영보험공사(KNIC)에 대한 사기 및 서류 조작 주장을 철회하고 보험금 청구액의 95%인 3천920만 유로를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에 합의했다고 보도, 공산주의 국가가 외국 법정에서 열린 거대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짐..
- 북한에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 재보험 컨소시엄에는 영국 로이드 신디케이트에 속한 3개사를 비롯, 유럽의 3대 보험사인 독일 알리안츠, 이탈리아 제너럴리와 함께 인도 제너럴, 이집트 미스르도 포함돼 있으며, 컨소시엄의 일원인 벨기에의 항공 전문 보험사인 아비아벨은 조정을 거부



- 앞서 조선국영보험공사는 지난 2005년 7월 북한 고려항공 소속 헬리콥터가 평양 인근 창고에 추락, 창고에 보관중이던 식량과 의류, 의약품 등 구호물자가 모두 불탄 뒤 고려항공에 보험금을 지급했다면서 재보험사들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음.

● **美, WFP 통한 대북 식량지원 잠정 중단(12/10, 미국의 소리방송)**

- 미국 정부가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진행하던 대북 식량지원을 잠정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0일 보도, 미국 정부는 지원 식량이 정확하게 필요한 주민들에게 전달되도록 미국측 요원을 북한에 추가로 파견하기 위해 협의해 왔으나 이 문제를 놓고 북한 당국과 이견이 있어 식량지원이 잠정 중단 상태라고 밝혔다고 VOA는 전했다.

라. 사회·문화 관련

● **北, 만수대창작사 통해 고려청자 재현 노력(12/12, 조선중앙통신)**

- 북한 최고의 미술가들이 모인 만수대창작사에서 고려청자를 계승하는데 주력, 최근 이 창작사의 도자기창작단 인민예술가인 신현수씨는 2008중국경덕진 국제도자기박람회에 '장생도 무늬 상감청자 꽃병'을 출품해 최고상인 금상을 수상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

● **北영화계 올해 화두는 '군인의 애국심'(12/12,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일 정권이 이른바 '선군정치'를 통치구호로 내세우고 경제건설과 체제단속을 위해 '사회주의 애국심'을 주민들에게 주문하고 있는 가운데 영화도 군인들의 애국심을 부각시키는 내용을 위주로 제작된 것으로 분석
- 올해 북한에서 나온 영화는 불과 4편. 그중 3편이 선군정치, 특히 군인들의 애국심에 초점을 맞췄음. 12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군 4.25예술영화촬영소가 영화 '그날의 중위'를 출시, 이 촬영소는 11월과 10월에도 '우리를 지켜보라'와 '군항의 부름소리'를 각각 출시하였음.

● **연지-룡징싼허-北칠보산 관광 육성(12/12, 연변일보)**

- 중국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가 2009년에 연지(延吉)-룡징(龍井)싼허(三陟)-북한 칠보산 관광코스를 집중 육성, 연변일보는 12일 "연길, 룡징, 도문 등 3개 도시에서는 명년에 3갈래의 관광코스를 육성하게 된다"며 "(대상은) 3개시의 구역, 경제와 관광자원에 따라 연길시구역 및 골프장-도문국문-룡징 비암산 역사문화유적 코스, 연길-도문-조선(북) 남양 1일 관광코스, 연길-룡징삼합-조선 칠보산 3일 관광코스 등이다"고 보도



● **北, AI예방사업 국가차원 전개(12/11, 조선신보)**

- 북한 당국이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률이 높은 겨울철에 들어서면서 예방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11일 보도, 내각이 ‘국가비상방역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예방사업을 총괄하는 가운데 보건성, 가금지도국, 상업성 등 관련기관과 각 도에서 활동하는 국가비상방역대책위원회 위원들이 매주 한차례 대책회의를 열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
- 이와 함께 야생 조류의 이동에 따른 전염을 막기 위해 강과 호수를 끼인 지역들에 감시초소를 설치하는 국경 방역초소에서는 외국산 가금 식품들이 반입되지 않도록 통제하고 있다고 신문은 설명

**2. 대외정세**

가. 6자 회담관련

● **러 북핵 대표, 北 중유 공급 중단 동의한 적 없어(12/13, 리아노보스티 통신)**

- 북핵 검증의정서 마련을 위한 제6차 6자회담 3차 수석대표회의(8~10일)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난 가운데 러시아 측 6자회담 수석대표가 미국이 주장한 대북 중유 제공 중단 합의설을 강력히 부인했다고 13일 리아 노보스티 통신이 보도
-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외무차관은 13일 “북한의 핵 검증 체제가 마련될 때까지 일본, 러시아, 중국, 미국, 한국이 북한에 대한 중유 선적을 더는 하지 않기로 했다는 미국 정부의 발표에 우리는 놀랐다”면서 “그런 조치에 러시아 대표단은 결코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밝힘.
- 그러면서 그는 “러시아는 6자 비핵화 합의에 따라 북한에 대한 연료공급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단계적으로 철수해야 하며 다른 당사국들도 에너지 지원 약속을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보로다브킨 차관은 13일 “3차분 5만t에 대한 선적을 12월내 마무리할 것”이라고 답변

● **김계관, 중유지원 중단시 핵불능화 속도 조절할 것(12/13, 연합뉴스)**

-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대북 중유 지원이 중단된다면 핵 시설 불능화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13일 밝힘. 김 부상은 베이징에서 열린 6자 회담에 참석한 뒤 북한으로 돌아가기 위해 공항에 도착,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북 에너지 지원에 대해 “우리로서는 그것이 중단되거나 공급되거나 개의치 않는다”면서도 “그것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능화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언급





- **北, 식량분배 감시에 이례적 협조(12/13,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당국이 미국의 대북 지원식량에 대한 분배를 감시하는 활동에 “이례적으로 매우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미국의 민간 구호단체들이 밝힘. 북한에 50만t의 식량을 지원하기로 한 미국 정부로부터 10만t의 분배를 위탁받은 이들 구호단체는 12월 8일 대북 지원 식량의 분배 현황을 미 의회에 이같이 보고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
  - 민간 구호단체 관계자들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민주, 공화 양당 전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비공개 보고회에서 민간 단체 관계자들은 “북한이 그동안 구호단체 관계자들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았던 자강도 일대에서 감시활동을 펼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설명, 또 한국어를 구사하는 감시요원을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의 허락을 받았으며 모든 식량 저장소는 물론 식량 분배를 기록한 문서에도 접근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지원된 식량이 제대로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되는지를 감시하는 활동에 북한 당국이 이번처럼 협조적이었던 사례가 없었다”고 평가
- **美, 현재같은 북·미 양자접촉 없을 것(12/11, 연합)**
  - 미국 정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개최해온 북·미 양자 접촉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향후에는 북·미 양자 접촉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정부 당국자는 11일 북핵 검증의정서 채택을 위해 지난 8일부터 진행해온 6자 수석대표회담이 끝난 뒤 “미국측은 워싱턴으로부터 받아들인 훈령에 따라 미·북간에 여태까지와 같은 양자접촉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회담 도중에 공개적으로 표명했다”고 언급
- **美, 北핵보유국 표기해명…수정은 안해(!2/10, 합동군사령부)**
  - 연례보고서에서 처음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에 포함시켜 물의를 빚었던 미 국방부 산하 합동군사령부(USJFCOM)가 10일 이는 “공식적인 미국 정부의 정책을 반영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으나 보고서 자체를 수정하지는 않음.
  - 합동군사령부는 이날 자료를 통해 “‘2008 합동작전 환경평가보고서’는 32페이지에 핵보유국에 대한 언급을 담고 있다. 북한에 관한 언급내용은 (핵과 관련된) 북한의 지위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을 반영한 것이 아니다”면서 “미국 정부는 오래전부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왔다”고 해명

#### 다. 북·중 관계

- **中國방부장, 북중 군교류·협조 강조(12/13, 조선중앙방송)**
  - 량광례(梁光烈) 중국 국방부장이 12일 중국 베이징 8.1청사에서 연경철 대좌(대령)를 단장으로 한 북한군 대외사업 일꾼 대표단을



만나 양국 군대간 상호 교류와 협조 강화를 강조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3일 보도, 이 자리에는 최진수 중국주재 북한대사와 대사관 무관이 참석

#### 라. 북·러 관계

##### ● 北철도성 조사단, 러 극동지역 방문(12/10, 러시아의 소리방송)

- 북한 철도성 조사단이 9일 러시아 극동지역 방문일정에 들어갔다고 러시아의 소리방송이 10일 보도, 철도성 조사단은 16일까지 러시아에 머물면서 화물처리센터와 극동 국립교통운수종합대학, 하바로프스스크센터 등을 방문하고 하바로프스크-2역 등을 둘러볼 예정
- 러시아와 북한은 지난 4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하산과 북한 라진항을 잇는 연장 54km 철도의 현대화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으며 양측은 지난 10월 라진-하산 철도 개건과 라진항 개선을 위한 합영 회사에 1억4천만유로의 출자를 완료했었음.

#### 마. 북·일 관계

##### ● 日, 6자회담서 대북 대화 시도 불발(12/12, 연합)

- 일본 정부는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된 6자회담의 기회를 이용해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시도했으나 북한측이 외면해 불발로 끝난 것으로 알려짐. 12일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6자회담에서 일본측 수석대표인 사이키 아키다카(齊木昭隆)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북한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 간에는 회담장에서 선 채로 간단한 인사말을 나누는 정도의 접촉도 이뤄지지 않았음.
- 북한은 핵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중국, 한국, 러시아 등 다른 참가국과는 개별 협의를 가졌으나 일본만은 제외시킨 것으로 전해짐.

#### 바. 기타외교 관계

##### ● 北, 최수현 레바논 대사 겸임 발령(12/9, 연합)

- 북한의 최수현 시리아 주재 대사가 12월 1일 술레이만 레바논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출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인사를 전달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9일 보도함으로써 최 대사가 레바논 주재 대사를 겸임하게 된 것으로 보임.
- \* 최 대사는 지난 8월 시리아 주재 대사로 임명, 북한 외무성에서 국제기구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해 왔으며 외무성 국장을 거쳐 1986년부터 외무성 부상으로 활동하면서 유엔 총회에서 북한 대표로 연설하거나 세계식량계획(WFP) 등 유엔 기구와 협상에 주로 나섰고,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유엔아동기금 등 유엔기구와의 창구 역할을 하기도 함.



### 3. 대남정세

#### ● 2009년 남북협력기금 1조5천86억원…8.6%증가(12/14, 연합)

- 2009년도 남북협력기금 규모가 정부 출연금의 대폭 삭감에도 불구하고 정부 원안인 1조5천85억6천100만원으로 확정, 이 액수는 올해 남북협력기금 예산인 1조3천887억4천100만원에 비해 약 8.6% 증액된 것임.
- 통일부 관계자는 14일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중 정부 출연금이 당초 책정한 6천500억원에서 3천500억원으로 3천억원 깎였지만 삭감된 3천억원은 여유자금 회수 규모를 늘리는 형식으로 충당기로 했다”고 밝힘.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사용하지 않은 남북협력기금 중 3천억원을 내년도로 이관해 사용할 방침임.
- 내년도 정부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쓰일 남북협력기금 예산은 당초 정부 안대로 쌀 40만t, 비료 30만t을 각각 지원할 수 있는 6천437억원으로 책정, 다만 정부가 이전까지 쌀 차관 형식으로 제공해온 당국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내년부터 무상지원으로 전환기로 함에 따라 지원 품목이 다양화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 통일부는 발표
- 또 남북경협 관련 예산은 북핵진전, 경제적 타당성, 재정부담 능력, 국민적 합의 등 ‘경협 4원칙’에 따라 추진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올해의 6천101억원에서 약 51% 감소된 3천6억원으로 최종 책정

#### ● 겨레말큰사전 편찬위원회 개최(12/9, 연합)

- 남북한 언어학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겨레말큰사전’ 16차 편찬회의가 12월 13~16일 평양에서 열린다고 남측 편찬사업회가 9일 발표, 편찬사업회에 따르면 남측 편찬위원장인 권재일 서울대 교수를 비롯한 24명이 평양을 방문해 북측 편찬위원회(위원장 문영호)와 올림말 재검토, 사이시옷 및 두음법칙 적용 협의, 각 4천개씩 어휘 집필, 새 어휘 교환 등 공동작업을 진행

#### ● 통일부, 북, 식량지원할 긴급상황 아니다(12/9, 연합)

- 북한에 곡물 83만6천t이 부족하다는 국제기구의 조사결과가 발표됐지만 정부는 9일 북한의 식량사정이 요청없이도 지원을 해야할 긴급한 상황은 아니라고 밝힘.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의 요청이 있으면 지원한다는 원칙은 지금도 살아있고,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지원을 검토한다는 입장도 살아있다”면서 “현재는 그런 두가지 상황이 아닌 상태로, 대북식량 지원에 관한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
- 김 대변인은 객관적 수치로 볼때 올해가 작년보다는 풍작이었다고 전제한 뒤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평가결과를 현재 유관 부처와 함께 검토 중”이라며 “대북지원 문제는 북한의 식량사정이나 국민여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부연



### 〈첨부 1〉 6자회담 의장성명 전문

북핵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11일 오후 제6차 6자회담 3차 수석대표 회담이 끝난 뒤 주요 토의 결과를 담은 의장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외교부가 배포한 비공식 의장성명 번역 전문이다.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가 베이징에서 2008년 12월8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됐다. 김계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부상, 사이키 아키다카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김 숙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러시아 연방외무부 차관, 크리스토퍼 힐 미 합중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각 대표단의 수석대표로 동 회의에 참석했다.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동 회의의 의장을 맡았다.

참가국들에 의해 합의된 세가지 사안이 의제였다. 1. 제2단계 조치의 완전한 이행 2. 한반도 비핵화 검증 3. 동북아시아 평화·안보 지도원칙.

참가국들은 이들 주제에 대해 진지하고 솔직하며 깊이있고 건설적인 논의를 했다.

참가국들은 9.19공동성명의 제2단계 조치이행에서 달성한 긍정적인 진전을 전적으로 인정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변 핵시설 불능화, 핵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신고, 그리고 경제·에너지 지원. 참가국들은 이와 관련 모든 참가국들의 적극적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참가국들은 제2단계 조치에 관한 10.3합의에 기술된 대로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와 중유 100만t 상당의 경제·에너지 제공을 병렬적으로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참가국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지원 제공을 위한 국제사회의 참여를 환영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의장국으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지원 관련 사안을 조율하기 위해 적절한 시점에 경제·에너지 협력 실무그룹회의를 소집할 것이다.

참가국들은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라는 9.19 공동성명의 목표를 재확인하였다. 참가국들은 검증 조건에 관한 합의를 위해 이뤄진 진전을 평가했다. 참가국들은 검증 과정에서 IAEA의 지원과 자문을 환영할 것이다.

러시아 연방은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보에 관한 지도원칙 수정안을 회람했다. 수정안은 참가국들에 의해 논의됐고,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참가국들은 상기 언급된 수정안의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러시아가 의장을 맡고 있는 관련 실무그룹회의를 2009년 2월 모스크바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참가국들은 관심사안 해결과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본의 진지한 노력을 장려했다.

참가국들은 6자회담 과정을 진전시키고, 동북아시아와 전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을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참가국들은 조속한 시일내에 차기 6자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연구실 제공



## II. 동북아정세

### 1. 대북한 관련

####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러' 북핵 대표, “北 중유 공급 중단 동의한 적 없어”(12/14)**
  - 북핵 검증의정서 마련을 위한 제6차 6자회담 3차 수석대표회의(8~10일)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난 가운데 러시아 측 6자회담 수석대표가 미국이 주장한 대북 중유 제공 중단 합의설을 강력히 부인했다고 13일 리아 노보스티 통신이 보도.
  -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외무차관은 13일 “북한의 핵 검증 체제가 마련될 때까지 일본, 러시아, 중국, 미국, 한국이 북한에 대한 중유 선적을 더는 하지 않기로 했다는 미국 정부의 발표에 우리는 놀랐다”면서 “그런 조치에 러시아 대표단은 결코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 그러면서 그는 “러시아는 6자 비핵화 합의에 따라 북한에 대한 연료 공급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단계적으로 철수해야 하며 다른 당사국들도 에너지 지원 약속을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손 매코맥 미 국무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북핵 검증 체제가 없으면 앞으로 대북 에너지 지원을 위한 중유선적은 더 진전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을 제외하고 6자회담에 참가하고 있는 나머지 5개국도 대북중유제공 중단을 양해했다”고 주장했다.
  - 매코맥 대변인은 “러시아가 제공키로 한 중유가 이미 북한으로 향한 것 같다”면서 “북한이 앞서 6자회담 틀 내에서 동의했던 북핵 검증 절차에 대해 합의하지 않으면 이번 중유제공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6자는 ‘2.13합의’에서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와 핵 프로그램 신고에 따라 나머지 참가국들은 중유 95만t에 해당하는 중유를 제공하기로 합의했고 현재 절반이 조금 넘는 50만t 정도를 제공했다. 보로다브킨 차관은 이날 “3차분 5만t에 대한 선적을 이달 안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 **中외교부 “북핵 불능화와 지원 동시 진행”(12/13)**
  - 중국의 친강(秦剛) 외교부 부대변인은 13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 대해 “핵의 불능화와 경제·에너지 지원은 동시에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교도(共同)통신이 보도.
  -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 참석한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를 수행해 방일한 친 부대변인은 “6자회담과 실무그룹회의를 통해 협의를 계속



해 나갈 것”이라며 중국이 의장국으로서 계속 조정을 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 친 부대변인은 또 최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6자 수석대표회담에서 핵검증 방법에 관해 합의하지 못하는데 대해서는 “의견에 차이가 있었으나 이번 회의에서 차이가 줄었다. 약속 대 약속,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 北김계관 “중유지원 중단시 핵불능화 속도 조절할 것”(12/13)

- 북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대북 중유 지원이 중단된다면 핵 시설 불능화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김 부상은 베이징에서 열린 6자 회담에 참석한 뒤 북한으로 돌아가기 위해 공항에 도착,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북 에너지 지원에 대해 “우리로서는 그것이 중단되거나 공급되거나 개의치 않는다”면서도 “그것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능화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말했다.
-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전날인 12일 “북핵 검증 체제가 없으면 향후 대북 에너지 지원을 위한 중유선적은 더 이상 진전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음. 이번주 베이징에서 열린 북핵 6자 회담은 참가국들이 검증 절차를 도출하는 데 실패한 채 마무리됐음.

#### ● 潘총장 “6자회담 이견 해소위해 추가 노력해야”(12/13)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12일 북핵 6자회담이 결렬된 것과 관련, “관계 당사국들이 이견을 극복해서 가까운 장래에 2단계 조치를 완벽하게 이행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반 총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핵 폐기를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면서 “유엔은 이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 적극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 ● 日, 6자회담서 대북 대화 시도 불발(12/12)

- 일본 정부는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된 6자회담의 기회를 이용해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시도했으나 북한측이 외면해 불발로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 12일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6자회담에서 일본측 수석대표인 사이키 아키다카(齊木昭隆)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북한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 간에는 회담장에서 선 채로 간단한 인사말을 나누는 정도의 접촉도 이뤄지지 않았음.
- 북한은 핵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중국, 한국, 러시아 등 다른 참가국과는 개별 협의를 가졌으나 일본만은 제외시킨 것으로 전해졌음. 이에 대해 사이키 국장은 11일 저녁 일본 기자들에게 “앞으로도 얘기할 기회를 모색해 나가겠다”며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었음.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6일 일본이 의무 이행을 거부하면서 “회담에는 계속 주제넘게 참가하겠다고 설치고 있다”고 비난하며 “철사



일본이 회담장에 찾아온다 해도 일본을 참가국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상종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음.

- 내각의 대변인을 겸하는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관방장관은 대북대화 재개 실패에 대해 “파이프가 끊어진 것은 아니다. 다만 직접 교섭을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해 지속적인 시도에도 불구하고 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밝혔음.

### ● 中, 의장성명 발표. “차기 6자회담 조속개최”(12/11)

- 북핵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11일 제6차 6자회담 3단계 수석대표 회담을 종료하면서 의장성명을 발표했다. 중국은 의장성명에서 검증과 관련, “참가국들은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명시한 9.19공동성명에 대해 재확인했으며 검증조건에 대한 합의를 향해 이뤄진 진전을 평가했다”면서 “검증과정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자문과 지원을 환영한다”고 언론적으로 언급했음.
- 성명은 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였던 검증의정서 논의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음. 성명은 또 “참가국들은 10.3합의에 나와있듯 영변 핵시설 불능화와 중유 100만t에 해당하는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은 병렬적으로 이행한다는데 동의했으며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동참을 환영한다”고 밝혔음.
- 경제·에너지지원 실무그룹 의장국인 한국은 대북지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적절한 시기에 실무그룹 회의를 개최하고 러시아는 동북아평화안보 원칙에 관한 초안을 회람시키고 더 많은 논의를 위해 내년 2월 모스크바에서 관련 실무그룹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고 성명은 전했다.
- 성명은 또 “참가국들은 비핵화 2단계(불능화 및 중유지원) 이행과 관련해 이뤄진 긍정적인 진전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각 참가국들의 노력을 높게 평가하고 북·미관계, 북·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주문했다”고 밝혔음. 성명은 “다음 6자회담을 조속히(at an early date) 개최한다는데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정확한 일정은 명시하지 못했음.

### ● 6자회담, 끝내 검증의정서 합의 실패(12/11)

- 북핵 검증의정서 마련을 위한 제6차 6자회담 3차 수석대표회의가 끝내 합의 도출에 실패했음. 회담 소식통은 11일 “오늘 오후 다시 수석대표간 회의를 열고 쟁점에 대해 논의했으나 검증의정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음.
- 앞서 미국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도 서 우두공향을 통해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증의정서 작성에 실패했다고 말했음. 다른 회담 소식통은 “다음 회담 일정도 잡지 못했으며 중국은 의장성명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음.



- 북한은 중국측에 제시한 의견문에서 ▲시료채취를 포함한 검증의정서에 대해 논의할 의지가 있으며 ▲경제·에너지 제공과 검증의정서를 연계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 유명환 외교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오전 전화통화를 갖고 합의문서 채택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 의장국 중국은 일단 ▲검증의정서 ▲비핵화 2단계 마무리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등 주요 의제별 토의 내용을 토대로 '의장성명'을 작성하고 문안을 참가국들과 협의하고 있음.
- 그러나 핵심의제인 검증의정서와 관련된 내용이 담기지 않거나 미흡한 내용이 포함되는데다 일부 국가들이 문서의 형식과 문안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수준이 낮은 문서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임.

### ● 6자회담 학술회의 내년 2월 애틀랜타 개최(12/11)

- 북핵 6자회담이 결렬 위기에 처한 가운데 미국의 차기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이 회담을 계속 추진할지 여부 등을 분석하는 국제 학술회의가 내년 2월 애틀랜타에서 개최.
- 애틀랜타 소재 조지아공대(조지아텍)의 샘 년 국제학대학 및 부설 국제전략·기술·정책연구센터(CIS TP)는 내년 2월26일 '북핵 6자회담과 한국의 에너지 안보'를 주제로 국제 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10일 웹 사이트를 통해 공식 발표했다.
-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후원으로 열리는 이 학술회의는 오바마 대통령이 새로 취임해 차기 행정부가 6자회담에 대한 평가와 지속여부 등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음.
- 학술회의에는 제임스 레이니 전 주한미국대사와 전해진 애틀랜타 총영사, 커트 통 국무부 한국과장 등이 기조연설을 함. 또 6자회담의 에너지 측면, 한국의 에너지 전략과 안보, 6자회담의 향후 전망 등에 관해 한미 양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이 패널 토론을 벌임.
- 패널리스트로는 빅터 차 조지타운대교수, 스테판 보즈워스 터프츠대교수, 노틸러스 연구소의 피터 헤이즈 소장 및 데이비드 본 히펠 선임연구원, 에드워드 초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연구원 등이 참석하며, 한국에서도 유지철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 김태현 중앙대 교수, 강정민 미국 스탠퍼드대 객원연구원, 안세현 서울대교수 등이 참가함.

### ● 北대변 조선신보 “시료채취엔 상응조치 있어야”(12/9)

- 베이징 북핵 6자 수석대표회담에서 제기된 '시료채취 문서화' 요구는 “10.3합의이행 완결에 장애를 조성하는 외교적 수사로 활용”되고 있다고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인 조선신보가 9일 주장. 조선신보는 '6자 단장회담, 10.3이행 동시행동 원칙 강조'라는 베이징발 기사에서 “6자의 그 어떤 합의들에서도 조선(북한)의 핵신고서에 대한 검증문제를 경제보상의 조건으로 규제한 조항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 이 신문은 같은 날 ‘검증논쟁, 6자구도의 기로’라는 해설기사에선 시료 채취 문제와 관련해 한국, 미국, 일본 3국의 견해와 입장에 “가리울 수 없는 격차”가 감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지난 10월 평양 협상에서 검증절차와 방법에 대해 북한과 합의하고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으나 “일본과 남조선(한국)은 여기에 이의를 내대면서 조미(북미) 평양합의를 6자의 틀 안에서 확인하기에 앞서 반드시 재협상해야 한다고 투덜거렸다”고 신문은 말했다.
- 이어 3국간 견해차는 “시료채취를 비핵화의 어느 단계에서 실시하겠는가에 관한 기술론의 양상을 띠고 있지만 근처에는 각측의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며 부시 행정부는 비핵화 2단계의 마무리를 바래서 북한과 합의를 이뤘으나 한국과 일본 정부는 “여기에 1차적인 의의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신문은 주장했다.
- 신문은 3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입장차도 시료채취에 관한 견해차가 불거지게 된 원인이라며, 미국은 “내외의 반대를 겨우 무릅쓰고 그런 대로 정책전환의 첫 걸음을” 내디뎠으나 일본은 “구태의연한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을 고수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보수정권 출범 후 정책기조도 바뀌어 북남관계를 차단하는 대결노선이 강행됐다”고 주장했다.
- 신문은 북한이 비핵화 과정에서 제기될 검증 자체를 반대하지 않으나 “검증방법 문서에 어떻게 표기되든 조선측이 미국을 비롯한 각측을 앞질러 행동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시료채취를 통해 조선이 추진한 핵계획의 전체상을 파악하는 단서를 얻는 시점이라면 당연히 미국을 비롯한 각측도 상응한 행동조치를 통해 비핵화를 크게 전진시키는 조건을 마련해 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 北대변 조선신보 “시료채취 요구는 동시행동 위반”(12/9)

- 베이징 북핵 6자 수석대표회담에서 제기된 ‘시료채취 문서화’ 요구는 “10.3합의이행 완결에 장애를 조성하는 외교적 수사로 활용”되고 있다고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인 조선신보가 9일 주장했다.
- 조선신보는 ‘6자 단장회담, 10.3이행 동시행동 원칙 강조’라는 베이징 발 기사에서 “6자의 그 어떤 합의들에서도 조선(북한)의 핵신고서에 대한 검증문제를 경제보상의 조건으로 규제한 조항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 신문은 “10.3합의 이행에서 남아 있는 행동조치는 무력화와 경제보상”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조선(북한)이 추진한 핵계획의 전체상을 파악하기 위한 ‘시료채취’를 현재의 무력화 단계에서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행동 대 행동’ 원칙의 위반”이라고 말했다.
- 신문은 또 6자회담 첫날 북러, 중미, 중러 등 양자회담이 열렸으나 북일 접촉은 없었다면서 북한이 지난 6일 외무성 대변인 답변에서



일본에 대해 “6자회담 참가국으로 치부하지 않으며 상종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점을 상기시켰음.

● “검증-지원 연계에 韓·日동의..나머지는 이견”<RFA>(12/9)

- 베이징 북핵 6자 수석대표회담에서 김 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검증의정서 채택과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을 ‘포괄적으로 연계’한 것과 관련,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한국의 고위급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한국과 일본이 이에 동의하고 있으며 나머지 국가들은 “조금씩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고 전해 주목됨.
- RFA는 9일 “한국과 일본 등은 검증의정서에 관한 합의없는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도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하고 “한국의 고위급 관계자는 한국과 일본은 검증문제와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 등을 포괄적으로 처리하자는 방안에 동의하고 있으며, 나머지 국가들은 ‘조금씩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소개했음.
- 한편 지난 10월 이뤄진 북미간 검증협상에서 북한이 ‘시료채취’라는 말 자체에는 동의한 적이 없지만 이 말을 포괄하는 ‘과학적 절차’라는 용어에는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RFA는 보도.
-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은 “평양 협상 당시 미국과 북한은 중국측 중재로 마련된 검증의정서 초안을 기초로 검증에 관해 분명 구두합의를 했다”며 “중국이 북한과 미국측 의사를 담아 마련한 초안에는 영변 원자로에서 시료채취는 물론 핵폐기물과 핵물질에 대한 수거, 핵물질과 장비에 대한 측정을 모두 망라하는 ‘과학적 절차’가 명기돼 있다”고 강조했다고 RFA는 전했다.

● “북, 일본 6자 회담 자격 문제삼아”<교도통신>(12/8)

- 북한은 8일 북핵 6자회담에 참석하고 있는 일본의 자격을 문제삼았다고 일본 관리가 말했음. 이 일본 관리는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에서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일본은 경제, 에너지 원조 프로젝트에 합류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일본이 6자 회담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 김 부상은 또 북한이 일본을 6자회담의 한 당사자로서 대하지 않고, 일본과 상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최근의 성명서에서 보여준 북한의 입장을 확실히 했다고 이 관리는 말했음. 일본 수석대표인 사이키 아키타카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북한의 주장을 일축하고, 원조 전에 일본인 납치 문제의 진전이 이뤄져야 하며, 다른 회담국들도 일본의 이런 입장을 지지한다고 말했음.
- 사이키 국장은 이날 수석대표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에게 “환경이 조성된다면 경제, 에너지 원조 프로젝트에 합류할 준비가 돼 있다는 우리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북한은 일본이 우려하는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고 말했음.



● “6자회담 핵심의제는 경제보상 완결” <조선신보>(12/8)

-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는 8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막된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의 핵심의제는 10.3합의에 따른 경제보상을 완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신문은 ‘6자 단장 회담, 2단계 마무리를 위한 협상’ 제목의 베이징발 기사에서 “이번 회담은 비핵화 2단계의 행동조치를 명기한 10.3합의의 이행을 마무리하기 위한 회합”이라며 “회담에서 논의되어야 할 핵심의제는 5자의 경제보상 완결”이라고 말했다.
- 조선신보는 이번 회담의 쟁점인 시료채취와 관련, “일본 등이 떠들고 있는 시료채취의 문서화는 10.3합의 이행이 지체되고 있는 원인을 무마하기 위한 외교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 신문은 이어 지난 10월 미국 행정부가 취한 대북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조치를 거론하면서 “현 단계에서 미완의 행동조치는 무력화(불능화)와 경제보상”이라며 “5자의 경제보상이 늦어지는 데 대응하여 현재 조선은 영변 핵시설에서 폐연료봉을 꺼내는 속도를 절반으로 줄이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 또 “6자 합의에는 중유 100만에 상응한 경제보상이 명기됐는데 조선 측에는 아직도 45만t에 해당되는 물자가 전달되지 않았다”며 “6자 협상에 복잡성을 조성하고 합의이행 지연의 책임을 조선 측에 들씌우는 시료채취 요구는 경제보상의무를 태공하거나 6자회담의 진전을 바라지 않는 측에서 나오고 있다”고 신문은 강조했다.

● “北이 검증방법 문서 작성 동의” <도쿄신문>(12/8)

- 북한이 지난 4, 5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국과의 협상에서 핵프로그램 신고 검증 방법을 포함해 일종의 합의 문서를 만드는 것 자체는 동의했다고 도쿄신문이 6자회담 소식통을 인용해 8일 보도.
- 신문은 북한의 이런 방침은 내년 1월 미국의 정권교체 후에도 6자회담의 틀을 유지하길 희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 일본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핵시설 시료 채취에 대해서는 문서에 명기하기를 거부하고 있어서 이날 오후 베이징(北京)서 열리는 북핵 6자 수석대표 회담은 난항이 예상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 소식통에 따르면 6자회담의 북한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와 가진 회담에서 이번 수석대표 회담에서 비핵화를 위한 제2단계 조치 완료를 중심으로 문서화하는 데는 이견을 보이지 않았음. 그러나 시료 채취 등 구체적인 검증 방법에 대해 김 부상은 “앞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음.



### ● 힐 “준비 많이했지만 어려운 회담될 것”(12/8)

-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8일 “검증의정서 초안을 회담하는 것은 중국의 책임”이라면서 “중국 측에 초안 회담과 관련된 계획을 물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 힐 차관보는 이날 오전 중국과의 양자 회동에 앞서 숙소인 베이징 차이나월드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최근 몇달 간 검증의정서(등 현안에 관한 합의문서)와 관련된 입장을 각국에 전달했기 때문에 참가국들은 서로의 입장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6자회담 개막식에 앞서 이날 오전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회동, 첫날 개막식을 비롯해 회담의 대략적인 일정과 과정 등을 논의했다.
- 힐 차관보는 ‘북한이 차기 오바마 행정부와 협상을 위해 이번 회담을 지원시키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이번 회담에서 성취해야 할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모든 기존의 6자회담 협상과 마찬가지로 이번 회담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 나. 미·북 관계

### ● “北교향악단, 미국 답방공연 추진”<WP>(12/13)

- 북핵검증서 마련을 위한 6자회담의 실패로 북핵문제가 교착상태에 빠져들고 있지만 북한 교향악단의 미국 방문공연이 민간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어 북미 양측간 문화교류를 통한 긴장완화가 기대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3일 보도.
- 특히 미 국무부는 6자회담의 결렬에도 불구하고 북한측과의 문화적 교류는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을 나타내 북한교향악단의 미국 공연이 경색된 북미관계의 돌파구 역할을 할지 주목됨.
- WP는 지난 2월 뉴욕필하모닉의 평양연주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북한의 조선국립교향악단이 미국 방문공연을 열망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현재 북한 관계자들과 미국의 음악계 주요인사들 사이에 진행중인 북한 교향악단의 미국 공연은 비공식적 문화외교를 통한 양측간 긴장완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뉴욕필을 이끌고 2월 평양공연을 다녀온 자린 메타 뉴욕필 사장은 북한의 음악계 주요인사들이 미국 공연 여부를 타진해왔다고 밝히고, 뉴욕에 소재한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현재 북한의 유엔대표부, 미 국무부, 뉴욕필 등을 상대로 내년 뉴욕의 링컨센터에서 160명의 북한 교향악단이 미국 청중앞에서 연주회를 갖는 방안을 중재하고 있다고 전했다.
- 카리에 부회장은 현재 북한 교향악단의 미국 방문행사를 위해 75만 달러의 기금 조성을 준비 중임.



● **美, 북핵 회담 교착에도 문화 교류는 “지지”(12/13)**

- 미 국무부 관계자는 북핵 6자 회담이 결렬됐지만 북한과의 문화 교류는 지지한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국무부 관계자는 6자 회담에서 비핵화 검증 절차가 도출되지 못한 것이 북한 조선국립교향악단의 뉴욕 공연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모든 상황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지만, 문화 교류는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13일 보도.
- 이 관계자는 이번 공연을 추진하고 있는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이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프레드 캐리어 부회장은 지난 10월 국무부로부터 뉴욕 공연을 위한 잠정적인 승인을 얻었으며, 공연 비용 75만 달러를 모으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 **“北,식량분배 감시에 이례적 협조”<美민간단체>(12/13)**

- 북한 당국이 미국의 대북 지원식량에 대한 분배를 감시하는 활동에 “이례적으로 매우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미국의 민간 구호단체들이 밝혔다.
- 북한에 50만t의 식량을 지원하기로 한 미국 정부로부터 10만t의 분배를 위탁받은 이들 구호단체는 지난 8일 대북 지원식량의 분배 현황을 미 의회에 보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RFA)이 13일 전했다.
- 민간 구호단체 관계자들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민주, 공화양당 전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비공개 보고회에서 민간단체 관계자들은 “북한이 그동안 구호단체 관계자들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았던 자강도 일대에서 감시활동을 펼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자강도는 압록강 중류를 사이에 두고 중국과 접했으며 대부분 험준한 산간지대여서 생활 환경이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 구호단체 관계자들은 또 한국어를 구사하는 감시요원을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의 허락을 받았으며 모든 식량 저장소는 물론 식량 분배를 기록한 문서에도 접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 **“美, 경제위기에도 대북 지원은 계속할 것”<美전문가>(12/13)**

- 미국이 경제 위기로 개발도상국들에 주는 국제 원조를 삭감하더라도 북한에 대해서는 ‘전략적 관계’를 고려해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미국 국제개발연구소 스티브 라멧트 선임연구원이 주장했다.
- 라멧트 연구원은 지난 9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 원조에 관한 세미나에서 “세계 경제 위기가 분명히 미국의 해외원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미국이 해외원조를 삭감할 때 자국과 전략적 관계에 놓여있는 국가들에 대한 원조를 줄이지는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이 사례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RFA)이 13일 전했다. 그는 북한과 같이 미국과 ‘전략적 관계’에 있는 나라로 이라크, 파키스탄 등을 꼽았음.

- 미국국제개발처(USAID)의 헨리에타 포어 처장도 지난 9월말 뉴욕에서 일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핵협상과 별개로 대북 식량 원조를 계속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으며, 다른 세미나에선 식량 원조의 지속 여부에 가장 중요한 변수는 식량을 받을 국가들의 책임감이라고 강조했다 RFA는 덧붙였다.
- 미 민간구호단체가 지난 8일 대북 식량지원 현황을 미국 의회에 보고하며 “북한 당국이 식량분배를 감시하는 활동에 매우 협조적”이라고 말했으며 미 의회는 분배 투명성이 확보된다면 행정부가 북한에 추가로 식량을 지원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RFA는 전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6월부터 1년간 50만t의 식량을 북한에 지원하겠다고 밝힌 뒤 현재까지 5차례 걸쳐 모두 14만3천t을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했음.

#### ● “北으로선 폭죽 터뜨리고 축하할 일”(12/13)

- 미국의 유력 일간지인 ‘워싱턴포스트(WP)’가 12일 미 국방부 산하 합동군사령부(USJFCOM)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표기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이번 보고서가 미칠 파문을 꼬집었음. 포스트는 이날 A25면에 실은 ‘새식구 추가(An Addition to the Family)’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미 국방부가 최근 56페이지 분량의 ‘2008 합동작전 환경평가보고서(The JOE 2008)’를 발간했다면서 “32페이지에 ‘아시아 대륙 연안에는 이미 5개 핵보유국이 있다: 중국, 인도, 파키스탄, 북한, 그리고 러시아’라는 문장이 있다”고 전했다.
- 포스트는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뒤 북한이 핵보유국으로서 자신들을 인정해 달라고 주장해 온 점을 상기시키는 듯 “북한 당국으로선 폭죽을 터뜨리고 축하할 일”이라며 이번 보고서의 파문을 지적. 그동안 북한을 “결코, 결코, 결코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미국 정부의 오랜 정책이었다고 포스트는 밝혔다.
- 포스트는 북한의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공식적으로 미국이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정부 보고서에서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승리선언’을 했다고도 꼬집었음. 보고서가 나간 뒤 미 국방부는 ‘전적으로 실수였다’며 신속하게 한 발 물러났고, 국방부 대변인은 ‘정책적으로 우리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으며 동맹국들에게 사과했다고 포스트는 소개했음.

#### ● 美 “북, 핵검증합의 존중 때까지 중유지원 중단”(12/13)

- 미국 정부는 12일 북한이 핵검증 합의를 지킬 때까지 북한에 대한 중유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음. 손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핵 검증 체제가 없으면 향후 대북 에너지 지원을



위한 중유선적은 더 이상 진전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을 제외하고 6자회담에 참가하고 있는 나머지 5개국도 대북중유제공 중단을 양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 매킨맥 대변인은 러시아가 제공기로 한 중유가 이미 북한으로 향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북한이 앞서 6자회담 틀내에서 동의했던 북핵 검증 절차에 대해 합의하지 않으면 이번 중유제공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앞서 미국은 최근 베이징에서 개최된 북핵 6자회담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자 북핵폐기를 위한 접근전략을 재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 “부시, ‘구두합의’만 믿고 北 테러지원국 해제”<WP>(12/13)

- 북핵 6자회담이 북한의 검증의정서 채택 거부로 아무런 소득없이 끝난 가운데 조지 부시 대통령은 지난 10월 검증문제에 대한 북미간 서면 합의없이 ‘구두약속’만 믿고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2일 보도.
- 포스트는 이날 북핵 6자회담 결렬 소식을 전하면서 이번 회담 결과는 부시 대통령에게 외교적 패배를 안겨주고, 출범을 앞둔 버락 오바마 당선인에게는 새로운 외교 골칫거리를 떠넘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포스트는 두 달 전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불능화했던 핵시설을 재가동하고 핵실험을 실시하겠다는 신호를 보내자 북한으로부터 핵시설 및 핵프로그램에 대한 검증계획에 합의한다는 구두약만 믿고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도박을 했다고 밝혔다.
- 미 관리들은 이제와서야 지난 10월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북한측 카운터파트간에는 구두합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인정했다고 포스트는 전했다. 관리들에 따르면 힐 차관보는 부시 대통령이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를 결정하기 전에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에 검증문제와 관련 북한과 구두로 합의했다고 자신이 이해하는 사항을 적어 건넸지만 북한은 힐의 요약문에 대해 서명을 거부했다는 것.
- 전문가들은 북한이 차기 오바마 행정부와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면서 재협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증의정서 채택을 거부했다고 믿고 있다고 포스트는 지적.

#### ● “北, 오바마 행정부와 대담한 외교행보 지속”<조선신보>(12/12)

-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12일 “조미(북미) 관계의 청산으로 비핵화를 실현한다는 조선(북한)의 목표는 확고부동하다”며 “미국에서 정권이 교체된 이후도 (행동대 행동) 원칙에 기초한 (북한의) 대담한 외교적 행보는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이 신문은 베이징 6자 수석대표회담 결과에 대한 일련의 기사들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핵 9.19공동성명의 2단계가 마무리되면 비핵화 다음 단계에선 “조미간 군사안보 현안을 포함한 보다 본질적인 문제”로 논의가 이행될 공산이 크며 “내년 이후 6자구도는 종래와 다른 양상을 띠고 새로운 외교적 시도가 시작될 수도 있다”고 북미간 양자협상의 촉에 더 비중을 두게 될 것임을 시사했음.

- ▲강경대응 시사 = 신문은 대북 경제지원의 완결 조건으로 검증문제를 압박하는 움직임이 “표면화될 경우 과거와 같은 조선의 강경대응이 나올 수 있다”며 미국의 정권교체 시기이지만 “조선은 남의 나라 사정에 상관없이 5자의 행동보류(경제지원 지연)에 원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해 북한이 불능화 중단과 원상복구 시도 등으로 대응할 가능성을 시사했음.
- ▲북미 양자협상 주축 활용 시사 = “그리고 방해세력의 의도와 달리 핵외교의 교착과 위기는 문제해결의 당사국인 조선과 미국의 직접교섭을 촉구하는 동기가 된다”고 신문은 주장했다. 또 “조미 양자협상이 성과를 내는 가운데 중국의 위치가 미묘하게 바뀌고 일본을 배제하려는 외교적인 역학이 작용”하는 등 “유동화하는 6자구도는 동북아 국제정치의 오늘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신문은 주장했다.
- ▲한·미·일 3자간 틈 찾아 확대경 = 조선신보는 이번 회담에서 한국과 일본이 “10.3합의를 마무리하기도 전에 조선이 검증문제에서 한발자국 더 나가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고 회담 결렬의 책임을 시료채취의 문서화를 강하게 요구한 한·일에 넘겼음.
- ▲시료채취도 행동대 행동 원칙따라 단계화 = 신문은 북한이 “앞으로 비핵화 과정에서 제기될 검증을 무조건 부정하고 있지 않다”며 “원칙에 기초한 단계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비핵화의 2단계 즉 미국이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로 정책전환의 첫발을 댄 데 불과한 현 시점에서 조선이 추진한 핵계획의 전체상을 파악하고 단서 제공을 의미하는 시료채취 실시를 거부하는 것은 별로 억지가 아니며 동시행동 원칙에 타당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 ▲중국을 ‘방관자’로 묘사 = 신문은 특히 중국이 이번 회담 과정에서 “동맹국” 내부의 옥신각신에 간참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지 방관자의 모양새를 보였다”며 “이번 회담은 중국 외교부의 공식적인 일정발표가 없는 채 개막됐다”고 지적하고 “여하튼 의장국으로서 체면이 깎이는 일”이라고 말했다. 신문은 “자기(중국)가 관여하지 않는 곳에서 문제가 발생했는가 하면 어느덧 조미간에 해결방도가 마련되는 일이 빈번하다”고 말하기도 했음.

### ● 백악관 “對北전략 재고할 필요있어”(12/12)

- 미국 백악관은 11일 핵검증체제 구축을 위한 베이징 북핵 6자 수석대표회담이 결렬된 것과 관련, 북한에 대한 전략을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데이비드 페리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그들(북한)이 우리와 협력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문서화하려고



하지 않아 회담이 후퇴했기 때문에 우리는 전에 밝힌 ‘행동 대 행동’에 대해 뭔가를 다시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다음 단계가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면서 구체적인 대응조치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음.

- 페리노 대변인은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지금 미국으로 돌아오는 중”이라면서 “힐 차관보가 돌아오면 빠른 시일내 주요한 내용에 대해 브리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6자회담에서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참가국 5개국이 검증의정서에 모두 합의했기 때문에 북한은 열려 있는 문으로 걸어나오기만 하면 되는 기회가 있었다면서 합의도출에 이르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음.

### ● 미국방 “北, 핵폭탄 여러 개 제조했다”(12/11)

- 미국 국방당국이 최근 북한을 ‘핵보유국’에 포함시킨 보고서를 내놓아 파문이 이는 가운데 이번엔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북한이 여러 개의 핵폭탄을 제조했다”고 밝혀 논란이 확산되고 있음. 최근 미 국방당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에 포함시키는 보고서를 발표한 것이 한국 정부의 주장대로 ‘단순 실수’가 아니라 미군 당국의 종합적이고 철저한 분석에 따른 결론일 수 있다는 관측을 뒷받침함.
- 게이츠 장관은 외교전문지인 ‘포린 어페어즈’ 최신호(2009년 1.2월호)에 기고한 ‘균형잡힌 전략(A Balanced Strategy)’ 제하의 글에서 “북한은 여러 개의 (핵)폭탄을 제조했고, 이란은 핵클럽 가입을 추구하고 있다(North Korea has built several bombs, and Iran seeks to join the nuclear club.)”고 밝혔음.
- 게이츠 장관은 중국과 러시아의 국방예산 증액 및 군사력 증강, 이른바 ‘불량국가’ 및 테러집단들의 화생방무기를 이용한 공격 가능성 등 현재 미국이 처한 안보상의 도전들을 언급하면서 이 같이 말했음.
- 게이츠 장관은 지난 1991년부터 1993년까지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지냈고,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역임한 데 이어 버락 오바마 차기 행정부에서도 국방장관에 유임됐다는 점에서 오바마 정부 출범을 앞둔 시점에 나온 그의 이 같은 발언은 주목됨.

### ● “오바마, 北 핵보유국 불인정 협상원칙 삼아야”(12/11)

- 에번스 리비어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은 10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대북협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대북정책이 한·미관계를 가늠하는 우선적인 사안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 리비어 회장은 또 양국 간 최대 현안의 하나인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한국이 미국의 자동차 업계의 어려움 등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장치를 몇 주나 몇 개월 내에 만들어 FTA에 대한 한국의 확고한 의지를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그는 이날 워싱턴 주미 한국대사관 코러스하우스에서 한 ‘오바마 행



정부의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관계' 제하의 강연에서 “대북협상에서 미국이 신뢰성을 확보하려면 북한을 어느 순간에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과 정치적 경제적인 관계 정상화는 완전한 비핵화가 달성된 이후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그는 또 “북한은 아직 핵을 포기한다는 전략적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이 오바마 차기행정부의 의지를 집권 초기에 시험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뒀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 대북협상에서 성과를 거두려면 북한에서 안보정책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최고위인사와 가능한 한 협상하는 채널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 그는 “철저한 사전조율과 준비를 거친 후에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인물을 통해 이같은 접촉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리버어 회장은 이어 한·미동맹 관계에서 FTA가 전시작전권 이양 문제와 더불어 최대 현안의 하나로 등장했다면서 FTA를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선 “한국이 미국의 자동차 업계의 어려움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워싱턴에서 FTA에 남아 있는 우려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장치를 몇 주나 몇 개월 내에 만들어 FTA 처리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그는 주문했다.

#### ● 애틀랜타·댈러스에 이북5도민회 신설(12/11)

- 행정안전부는 내년 초 미국 애틀랜타 및 댈러스에 이북5도민회를 신설키로 했다. 행정안전부의 이같은 방침은 현재 미국, 캐나다, 독일, 호주 등 4개국 17개 지역에 구성돼 있는 이북5도민회의 해외 조직을 강화해 해외에 거주하는 북한 출신 한인동포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이산가족 상봉 지원 등 각종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정현규 이북5도위 황해도 사무국장을 미국 댈러스와 애틀랜타로 보내 현지 이북5도민 관계자들을 만나 현황을 파악하고, 5도민회 신설과 관련한 여론을 수렴중.
- 애틀랜타를 방문중인 정 국장은 1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미국의 경우 현재 로스앤젤레스와 시카고, 워싱턴 D.C. 등 9개 한인 밀집지역에 이북5도민회가 구성돼 있다”면서 “애틀랜타와 댈러스의 경우 한인 인구도 많고, 이북 5도민도 각각 300명 이상씩 거주하고 있는 만큼 내년 3월경 이북5도민회를 구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정 국장은 이어 “이북5도민회가 구성되면 정부가 현재 임명한 이북5도지사 중 한명이 애틀랜타와 댈러스를 방문한 가운데 창립식을 갖도록 할 예정”이라면서 “5도민회는 향후 정부와 한인 2,3세대들간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美, ‘北핵보유국’ 표기해명..수정은 안해(12/11)**

- 연례보고서에서 처음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에 포함시켜 물의를 빚었던 미 국방부 산하 합동군사령부(USJFCOM)가 10일 이는 “공식적인 미국 정부의 정책을 반영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으나 보고서 자체를 수정하지는 않았음.
- 합동군사령부는 이날 자료를 통해 “‘2008 합동작전 환경평가보고서’는 32페이지에 핵보유국에 대한 언급을 담고 있음. 북한에 관한 언급 내용은 (핵과 관련된) 북한의 지위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을 반영한 것이 아니다”면서 “미국 정부는 오래전부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왔다”고 해명했음. 합동군사령부는 또 “주미한국대사관에도 이와 같은 점을 이미 명확히 했다”고 밝혔음. 하지만 합동군사령부는 당초 한국 외교통상부가 브리핑을 통해 밝힌 것처럼 보고서 내용을 수정하지는 않았음.
- 보고서는 여전히 32페이지에 태평양 및 인도양지역에 대해 기술하면서 “아시아 대륙 연안에는 이미 5개 핵보유국이 있다(The rim of the great Asian continent is already home to five nuclear powers)”면서 5개 핵보유국으로 “중국, 인도, 파키스탄, 북한, 러시아”를 영문 알파벳 순서에 따라 차례로 명기했음.

● **“美, WFP 통한 대북 식량지원 잠정 중단” <VOA> (12/10)**

- 미국 정부가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진행하던 대북 식량지원을 잠정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0일 보도.
- 미국 정부는 지원 식량이 정확하게 필요한 주민들에게 전달되도록 미국측 요원을 북한에 추가로 파견하기 위해 협의해 왔으나 이 문제를 놓고 북한 당국과 이견이 있어 식량지원이 잠정 중단 상태라고 밝혔다고 VOA는 전했다.
- WFP측은 지난 8월 북한에 도착한 지원 식량을 마지막으로 4개월동안 추가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다음 선적분이 언제 북한에 도착할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로부터 전혀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음.
- WFP 아시아사무소의 폴 리즐리 대변인은 “가능한 빨리 미국 정부의 식량 지원이 재개되길 바란다”면서 “지난 10월 수확량 조사 결과 북한의 식량 부족이 계속돼 굶주리는 주민이 40%에 달한다”고 말했음. 미국 정부는 북한에 지원키로 한 식량 50만t 가운데 40만t을 WFP를 통해, 나머지 10만t은 미국의 민간구호단체들을 통해 각각 북한 주민들에게 분배키로 했었음.

● **“北, 보험소송 승소..5천100만달러 받게 돼” <RFA> (12/10)**

- 북한이 유럽의 재보험사들과 법정 공방에서 이겨 알리안츠 등으로부터 4천만 유로(미화 5천100만 달러)의 보험금을 받게 됐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0일 보도.



- 이 방송은 북한의 조선국영보험회사(KNIC)를 대리하는 영국의 법률 회사 일본 미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하고 특히 유럽 재보험사측은 북한측의 보험금 요구가 사기라던 그동안의 주장을 철회한다는 내용도 재보험사와 북한측간 합의문에 포함됐다고 설명.
- 북한 당국은 지난 2005년 7월 고려항공 소속의 헬리콥터가 평양 인근 창고에 추락해 창고 건물과 건물안의 구호물자가 다 불타버리자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유럽 재보험사측에 청구했으나 재보험사측은 북한측이 사고 발생 열흘도 안돼 수십만가지의 피해 품목을 빠짐없이 제출하고 보상금을 요구한 것은 신빙성이 없는 사기라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 소송이 진행돼 왔음.
- 북한의 조선국영보험공사가 받는 보험금은 지난달 12일부터 시작된 재판에서 북측이 요구한 보험금 4천500만 유로(6천600만 달러)의 95%에 해당함.

#### ● “구글, 유튜브도 대북 인권운동 협력키로”<RFA>(12/9)

- 미국 국무부와 구글, 유튜브 등 세계적인 인터넷 기업, 그리고 민간 단체들이 인터넷 방송과 동영상에 이용해 미얀마와 쿠바는 물론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과 북한의 민주화를 위해 협력키로 합의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9일 전했다.
- 지난 3~5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청년운동연합회의 참석자들은 미얀마와 쿠바 등 다른 독재국가와 함께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북한의 인권과 비민주적인 실상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인터넷을 이용해 이를 널리 알리는 방법과 사회운동으로 확산시키는 방안을 논의했음.
- 이 회의는 미 국무부가 주관하고 구글, 유튜브, MTV, 컬럼비아대 법대와 전 세계 15개국에서 17개 비정부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북한과 관련해선 탈북자 구호단체인 ‘크로싱 보더’의 마이크 김 대표가 국무부의 초청을 받았음.
- 미 국무부의 제러드 코헨 정책기획관은 “국무부가 북한의 인권문제를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있다”며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점을 확신하고, 얼마든지 이런 방법들을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김 대표는 설명했다.
- RFA는 뉴욕 청년운동연합회의에 대해 “민주주의와 국민의 인권을 위협하는 전 세계 독재국가에서 인터넷이나 동영상, 인터넷 방송으로 민주화와 인권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라고 설명했다.

#### ● “美 고위 관리 김정일 뇌졸중 정보 확인”<교도통신>(12/9)

-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이 지난 8월 뇌졸중을 일으켰다는 정보를 미국 정부가 확보했다는 사실을 조지 부시 미국 정부의 고위 관리가 처음으로 확인해 줬다고 교도(共同)통신이 9일 보도.



- 이 관리는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국 정부가 한국, 일본 등 동맹국과 협력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비상 계획의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음을 시사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내에서는 지난 9월 “김 위원장이 최근 중병을 당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조가 있으며 아마 뇌졸중일 것이다”라는 관측이 제기됐었음.
- 이 고위 관리는 와일더 선임보좌관이 말한 ‘건강 위기’라는 표현과 관련, “뇌졸중은 건강 위기라는 표현과 완전히 일치한다”면서 김 위원장이 뇌졸중을 겪었다는 분석이 미국 정부 내에서 공식으로 공유되고 있다고 밝혔음.

### ● 미국방보고서, 北 ‘핵보유국’ 명기 파문(12/9)

- 미 국방부 산하 합동군사령부(U.S. Joint Operation Command)의 ‘2008 합동작전 환경평가보고서(The Joint Operation Environment 2008)’는 미국이 직면한 위협을 지역별로 분석하면서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에 포함시켰음.
- 지난 달 25일 발간된 이 보고서는 태평양 및 인도양지역에 대해 기술하면서 “아시아 대륙 연안에는 이미 5개 핵보유국이 있다(The rim of the great Asian continent is already home to five nuclear powers)”면서 5개 핵보유국으로 “중국, 인도, 파키스탄, 북한, 러시아”를 영문 이니셜 순서에 따라 차례로 명기했음. 미 정부 보고서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
-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이후 조지 부시 대통령을 비롯해 미국 정부는 수차례에 걸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천명하며 북한에 대해 모든 핵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요구해왔음.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임을 선언하며 북핵 폐기에 목표를 뒀은 6자회담이 군축회담이 돼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음.
- 또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도 대선 과정 및 당선 이후에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저지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인하고 직접적인 외교를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천명해왔음.

### 다. 일·북 관계

#### ● “김정일 2002년 납치인정은 보상금 100억달러 때문”(12/14)

- 북한 조선노동당 대남공작기관인 통일전선부 출신으로 한국에 망명한 장철현씨가 지난 1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002년 북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인 납치를 인정한 것은 일본으로부터 보상금 100억달러를 받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14일 보도.
- 신문에 따르면 이날 심포지엄에서 장씨는 김 위원장이 북한에 의한



- 일본인 납치를 인정한 2002년 정상회담 직후 북한 통일전선부 간부 용으로 배포된 강연자료에 “납치를 인정하면 일본 정권이 북한에 100억달러를 지불하기로 했다”고 쓰여져 있었다고 밝혔음.
- 그는 또 “납치자의 일본 인도가 아니라 납치 인정만으로 일본 통치에 대한 보상금 100억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들었다”고 말해 북한측이 납치 인정을 통해 거액의 경제적 대가를 기대했었다고 증언했음.
  - 장씨는 “한국도 일본도 김정일 독재 체제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며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통일전략부, 당 군사부, 국가보위부 등 주요 부서의 부장은 모두 공석이다. 이런 핵심 부서는 김정일 위원장이 부장을 겸임, 장악하고 있다”고 말했음.
  - 그는 이어 “한국과 일본에는 ‘북한에서 온건파와 강경파가 대립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가 있지만 이는 있을 수 없다”며 “북한은 사회주의 형식을 갖고 있지만 철저한 개인독재로 (온건파와 강경파간) 투쟁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장씨는 김 위원장의 최측근으로 당 조직지도부에서 제1부부장을 맡고 있는 이제강(조직 담당), 이용철(군사 담당)씨와 장성택 행정부장 등 3명을 꼽고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을 당시에는 이미 김정일 독재가 시작됐었다”며 “그러나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해도 그런 후계체제는 없다. 권력 공백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 라. 기타

### ● 프랑스 의사 “김정일 치료한 적 없다” <AP>(12/14)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치료차 북한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프랑스의 뇌신경 전문의인 프랑수아-자비에 루 박사는 13일 김 위원장을 치료했다는 프랑스 언론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했음. 루 박사는 이날 AP통신과의 전화통화에서 프랑스 일간 르 피가로에 최근 보도된 자신의 발언은 와전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이같이 밝혔음.
- 앞서 르 피가로 11일자에 따르면 루 박사는 “김 위원장은 뇌혈관 사고의 희생자이나 실제로 외과적 수술을 받지 않았으며 건강 상태가 좋아질 것”이라며 “요즘 공개되는 사진들은 진짜로 보인다. 그는 북한을 통치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었음.
- 그러나 루 박사는 이 신문의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자신은 김 위원장을 본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김 위원장의 건강과 관련한 정보를 하나도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 루 박사는 지난 4월 몇몇 동료들과 최신 척추 수술법을 가르치기 위해, 10월에는 24시간에 걸쳐 신경외과 의료기관에 필요한 물품의 목록을 만들기 위해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다면서도 “다른 프랑스와 독일 의사들과 마찬가지로, 여러차례 방북했지만 지도자를 본 적은 없다”고 말했음.
- 르 피가로 11일자는 루 박사가 “진료에 관한 비밀과 나라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더이상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었음.

### ● 에스토니아, 北에 4만2천달러 식량지원(12/13)

- 유럽연합(EU) 가맹국인 에스토니아가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용으로 세계식량계획(WFP)에 현금 50만 크룬(4만2천달러)을 기부했다고 에스토니아 외무부가 밝혔다. 에스토니아 외무부 대변인은 “내년에도 북한에서 식량 사정이 악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870만명의 북한 주민이 긴급하게 식량지원을 필요로 해서 이번 지원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3일 전했다.

### ● 한중일, 금융위기 포괄협력...FTA 민간연구 확대(12/13)

- 한국과 중국, 일본 3국 정상은 13일 일본 후쿠오카(福岡)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갖고 3국간 동반자 관계 구축, 글로벌 금융위기를 포함한 제반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 추구, 6자회담을 통한 북핵 폐기 긴밀 협의 등에 합의했음.
- 이명박 대통령과 중국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일본 아소 다로(麻生太郎) 총리는 3국 내에서는 처음으로 열린 이날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한중일 3국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성명’, ‘국제금융 및 경제에 관한 공동성명’, ‘한중일 3국 협력 증진을 위한 행동계획’, ‘재난관리 협력에 관한 한중일 3국 공동발표문’을 채택했음.
- 동반자 관계 공동성명은 3국간 협력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금융·경제 공동성명은 금융위기 공조 방안을, 3국 행동계획은 2~3년 정도의 중단기 협력사업 등을 제시하고 있음.
- 3국 정상은 우선 동반자 관계 공동성명에서 “한중일 협력이 세계 경제 및 금융상황과 관련한 심각한 도전에 대처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 정부 및 민간을 막론하고 포괄적인 협력을 추구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음.
- 또 “이번 정상회의가 역내 평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3국간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다자무대를 빌린 3국회의와는 별개로 3국 내에서 정상회담을 정례적으로 개최키로 했음. 3국간 2차 정상회담은 내년 중국에서, 3차 정상회담은 2010년 한국에서 각각 열릴 예정.
- 금융위기와 관련, 3국 정상은 국제금융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3국간 공조가 필요하다는 공통의 인식을 토대로 G20 금융정상회의의 후속조치 적극 이행, 아시아 역내 상호자금 지원체제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조속한 타결 등을 위해 적극 노력키로 했음.
- 또 보호무역주의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12개월간 신규 무역장벽



도입 및 수출제한 조치 자제, WTO(세계무역기구) 기준에 배치되는 무역촉진 조치 자제 등을 결의하고 지역협력 확대를 위해 한중, 한일 금융당국 간에 체결한 통화스와프 300억달러 확대 조치를 환영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 개도국 지원 확대를 위한 재원확대 필요성에도 의견을 같이했음.

- 3국 정상은 이와 함께 북핵문제와 관련해 최근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된 6자회담에서 의장국인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평가하는 한편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검증체제 수립 노력에 비협조적 자세를 보인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앞으로 6자회담 등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실현을 위해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음.
- 이밖에 3국 정상은 지역간 협력증진을 위해 3국간 FTA(자유무역협정) 공동연구 심화 및 투자협정 체결교섭 가속화, 외교장관 및 차관보 회의 정례적 개최, 협력사업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사이버 사무국’ 내년 개설, 기후변화와 유엔 개혁 포함한 국제문제 협력, 지진·태풍·홍수 등 재난관리 협력 증진 등에도 공감대를 이뤘음.
- FTA와 관련해 원 총리와 아소 총리는 앞서 열린 한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FTA협상의 조속한 착수를 요청했고,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내년에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럴 때 일수록 그런 걸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음.

### ● “한국인 86% ‘전세계 핵무기 제거해야’”(12/13)

- 한국인 가운데 86%는 전세계 핵무기 보유국들이 시한을 정해 이를 모두 제거하고 아직 핵을 갖지 않은 국가들은 핵을 개발하지 않는다는 협정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음.
- 월드퍼브릭오피니언이 한국을 비롯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8개국(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파키스탄·인도·이스라엘) 등 전세계 21개국 1만9천142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8월 까지 핵무기 폐기 및 핵개발 금지 협정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12일 밝혔음.
- 조사결과에 따르면 21개국 응답자 가운데 76%가 이 같은 협정의 필요성에 찬성했으며, 반대한다는 견해는 16%에 불과했다. 특히 ‘적극 찬성한다’는 의견도 50%에 달했음.
- 한국의 경우 응답자 중 86%(적극 찬성 53%, 찬성 33%)가 이 협정의 필요성에 공감을 드러낸 반면, 15%(반대 11%, 적극 반대 4%)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월드퍼브릭오피니언측이 밝혔음.
- 핵무기 보유국으로 공식 인정받고 있는 5개국의 경우 미국 77%, 영국 81%, 프랑스 86%, 중국 83%, 러시아 69%의 응답자가 이 같은 협정에 찬성했음.
- 반면 공식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파키스탄에선 46%가 이 협정에 찬성한다고 밝혔고 반대한다는 의견도 41%에 달해 큰 차이가 없었음.



- 월드퍼브릭오피니언측은 핵무기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국가 가운데 현실적으로 여론조사가 불가능한 북한만 제외됐다고 밝혔다.

#### ● 北, 유엔기구에 소액대출사업 재개 요청(12/12)

- 유엔의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이 지난 199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진행한 북한의 협동농장 주민을 위한 소액대출 지원사업을 북한 당국의 요청에 따라 2010년 이 사업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2일 전했다.
- RFA에 따르면 사업평가를 위해 지난주 방북한 IFAD의 북한담당자 가네쉬 다파씨는 “12년동안 북한의 9만900여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미화 50달러 미만의 소액대출을 지원해왔다”며 소액대출을 받은 협동농장을 가구들은 대출금으로 돼지나 씨감자를 구입해 “예전보다 나은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 다파씨는 IFAD가 북한에서 소액대출 지원 사업이 성공적이라는 평가와 북한 당국의 요청에 따라 내년에 대북 사업전략을 준비해 2010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액대출 사업은 1976년 방글라데시의 모하메드 유누스 교수가 처음 시작한 것으로, 이후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의 개발도상국 뿐 아니라 미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빈곤퇴치 제도로 확대 발전됐다.
- IFAD의 대북 소액대출 지원사업은 북한의 조선중앙은행에 자금을 지원하면 이 은행이 자체 자금을 더해 군 단위의 지방은행을 통해 선정된 협동농장과 주민들에게 대출해주고, 이 돈을 받은 농장과 주민들은 가축이나 영농기구를 마련해 농업생산을 향상시킨 후 잉여 가축이나 식량을 팔아 지방은행에 갚는 방식으로 운용됐다.
- IFAD는 지난 12년간 북한의 잠업개발 사업(1996~2002), 축산복구 지원 사업(1997~2003), 산간지대 식량안보 사업(2001~2008) 등을 위해 모두 6천910만달러(약 933억원)를 10년 거치, 40년 상환에 수수료 0.75%의 조건으로 빌려줬음.
- IFAD는 북한에서 식량이 부족한 지역의 소득이 낮은 협동농장, 협동농장 내에서도 저소득 여성을 우선 지원하는 기준을 갖고 있으나 대출 대상자의 선정 과정은 전적으로 북한 당국이 했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가 힘들다고 다파씨는 설명했다. 다만 IFAD 직원이 정기적으로 북한을 방문하고, 세계식량계획(WFP)이나 식량농업기구(FAO)의 도움을 받아 감시 활동을 펴고 있다고 다파씨는 덧붙였다.
- IFAD 외에도 호주의 마라나타 신탁회사가 2004년부터 북한 재무성과 합작으로 ‘조선-마라나타 은행’을 설립해 북한의 공장과 기업, 일반 주민에 자금을 대출하고 있으며, 미국의 소액대출 민간단체인 ‘키바(KIVA)’도 대북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으나 북한 당국과 합작없이 민간차원의 대출 사업은 어렵다는 판단 아래 북한 진출을 무기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RFA는 전했다.



● 2002~06년 북한인 1천442명 EU 시민권 취득(12/12)

- 지난 2002~06년 5년간 북한인 1천442명이 유럽연합(EU) 회원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음. 외국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외교관 또는 ‘출신성분이 좋은’ 유학생 정도로 한정돼 북한인으로서 외국에 장기간 거주한 뒤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이 없다고 봤을 때 난민 신분의 탈북자로 추정되지만 조선족도 포함됐을 것이라는 분석.
- 12일 EU 통계기관인 유로스타트(Eurostat)에 따르면 2002~06년 EU 회원국 가운데 독일에서 시민권을 신규 취득한 북한인이 518명으로 가장 많았고 프랑스에서도 492명이나 있었음.
- 또 스페인에서 이 기간 302명의 북한인이 새롭게 시민권을 취득했고 영국에서 35명, 덴마크에서 32명, 아일랜드에서 20명, 오스트리아와 스웨덴 각 15명, 불가리아 11명, 그리고 네덜란드에서도 2명의 북한인이 시민권을 취득했음.
- 국가, 연도에 따라 유로스타트에 자료가 누락된 경우도 있어 이를 감안할 경우 실제 2002~06년에 새롭게 EU 회원국 시민권을 취득한 북한인은 이보다 더 많아 보임. EU 시민권을 취득한 이들의 신분과 시민권 취득 자격 등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지만 대부분 북한을 탈출, 중국 등을 거쳐 EU 회원국에 들어와 난민 지위를 얻은 뒤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됨.
- 그러나 일부는 중국 국적을 가진 조선족이 자유세계를 찾아 유럽으로 건너와 탈북자로 가장, 난민 지위를 얻어 시민권을 취득한 사례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관계당국은 파악하고 있음.

● “北류경호텔에 중동자본 이어 홍콩기업도 투자”<RFA>(12/11)

- 16년만에 공사가 재개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 평양의 류경호텔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이 늘고 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해외 투자사와 대북 지원단체, 대북사업체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11일 전했다.
- 북한은 1987년 프랑스 기술과 자본으로 평양 보통강구역에 105층 짜리 피라미드형 류경호텔을 짓기 시작했으나 1992년 외부 골조 등 60% 공정을 보인 상태에서 자금난으로 공사를 중단했다가 이집트 통신 회사인 오라스콤의 1억달러 투자로 지난 4월부터 공사를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에 따라 공사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활발하게 진행중인 가운데 아랍에미리트연합의 국영부동산 개발회사인 ‘에마르’가 북한의 광산 개발권을 대가로 이 호텔 공사에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데 이어 홍콩의 “유명한 기업체”도 류경호텔 건축 투자에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다고 RFA는 보도.
- 이 방송에 따르면 홍콩의 유명 투자회사 고위 관계자는 홍콩의 유명한 기업체가 류경호텔의 재건축 투자에 뛰어 들었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이 기업체의 대북 진출을 위한 교두보 성격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음. 그는 오라스콤, 에마르, 홍콩 기업이 잇따라 류경호텔 건축에 투자하는 것을 가리켜, 류경호텔이 북한 진출을 위한 외국 기업들의 다리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음.

- 최근 외벽에 유리를 붙이는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류경호텔은 2011년까지 3개층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사무실과 국제회의장 등으로 활용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 “北 유럽재보험사에 승소..700억원 받게돼”(12/11)

- 북한이 영국 등 유럽 재보험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이겨 3천920만 유로, 한화로 약 700억원을 받게 됐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11일 보도.
- 신문은 이날자 경제섹션 헤드라인 기사를 통해 런던고등법원 심리에서 영국 로이드를 비롯한 재보험사들이 북한 조선국영보험공사(KNIC)에 대한 사기 및 서류 조작 주장을 철회하고 보험금 청구액의 95%인 3천920만 유로를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에 합의했다고 보도.
- 공산주의 국가가 외국 법정에서 열린 거대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 북한에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 재보험 컨소시엄에는 영국 로이드 신디케이트에 속한 3개사를 비롯, 유럽의 3대 보험사인 독일 알리안츠, 이탈리아 제너럴리와 함께 인도 제너럴, 이집트 미스르도 포함돼 있으며, 컨소시엄의 일원인 벨기에의 항공 전문 보험사인 아비아벨은 조정을 거부했음.
- 앞서 조선국영보험공사는 지난 2005년 7월 북한 고려항공 소속 헬리콥터가 평양 인근 창고에 추락, 창고에 보관중이던 식량과 의류, 의약품 등 구호물자가 모두 불탄 뒤 고려항공에 보험금을 지급했다면서 재보험사들에 보험금을 청구했음.
- 이에 재보험사 측은 북한이 사고 발생 열흘도 안돼 수십만 가지 피해 품목을 제출하는 등 주장이나 증거자료에 신빙성이 없다며 북한 법원이 판결한 4천만달러의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음.

#### ● “개성공단 여성 근로자 탈북해 제3국 체류”(12/10)

- 개성공단에서 일하던 북한 여성 근로자가 탈북해 제3국에 머물고 있으며 한국행을 희망하고 있다고 김용화 탈북난민인권협회장이 10일 밝혔음. 용화 회장은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이 북한 여성은 27세의 평안남도 출신으로, 지난 9월말께 개성공단에서 개성 시내로 나온 뒤 감시 소홀을 틈타 탈북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이 여성은 지금까지 4차례 전화를 걸어와 “한국으로 가고 싶다. 도와줄 수 없느냐”고 도움을 요청했다고 김 회장은 덧붙였다.
- 김 회장은 “이 여성은 2년 계약으로 개성공단에 들어갔고, 그 전에 사귀던 남성이 있었는데 북한 당국이 공단 여성 근로자들에게 결혼을



허가하지 않기 때문에 고민했던 것 같다”며 “이 문제로 경고도 한번 받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 그는 “개성공단 근로자의 결혼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인권 탄압”이라고 말하고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월급도 직불제가 시행되지 않아 업체측이 임금으로 지불하는 미국 달러화(60달러 안팎)가운데 2달러 정도만 북한돈 2천500-2천800원으로 바꿔 받음으로써 임금 착취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 北실상다큐 ‘김정일리아’, 국제영화제 진출(12/10)

- 미국인 여류감독 N.C. 하이킨이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북한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만든 다큐멘터리가 미국 독립영화 축제인 선댄스 영화제의 다큐멘터리 국제 경쟁부문에 진출했다고 ‘미국의 소리 (VOA)’ 방송이 10일 전했다.
- 북한에서 ‘김정일화(花)’로 신성시 되는 ‘김정일리아’라는 제목의 이 영화는 탈북자 13명이 북한의 수용소 실태와 굶주림, 표현의 자유 부재 등 북한사회 전반에 대해 인터뷰 형식으로 증언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하이킨 감독은 VOA와 인터뷰에서 “출연자들은 북한의 엘리트 출신부터 수용소 출신 강철환씨와 신동혁씨 등 다양하다”면서 “다양한 증언들을 하나로 통일하는 공통분모는 이들이 북한을 정말 사랑하고, 북한이 변화하기를 바란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 그는 다큐멘터리 제목을 ‘김정일리아’로 정한 데 대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름을 딴 ‘김정일리아’의 꽃말이 역설적으로 평화, 사랑, 지혜와 정의라는 점이 매우 놀라웠다”며 이런 꽃말을 영화의 주제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 선댄스영화제는 내년 1월 15일부터 25일까지 미국 유타주 파크시에서 열림.



[참고 1] <한중일 정상 채택 공동성명·선언문 요약> (연합뉴스, 12/13)

(후쿠오카=연합뉴스) 심인성 기자 = 이명박 대통령과 중국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일본 아소 다로(麻生太郎) 총리는 13일 후쿠오카(福岡)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일 3국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서명에 서명하고 구체적 실천과제들을 담은 ‘국제금융 및 경제에 관한 공동성명’, ‘한중일 3국 협력 증진을 위한 행동계획’, ‘재난관리 협력에 관한 한중일 3국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

다음은 공동성명과 선언문 요지.

◇한중일 3국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성명

- ▲금번 정상회의의 개최 목적은 지금까지 이루어 온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한중일 3국 협력을 가속화시킬 기반을 다지기 위함이다.
- ▲3국은 경제·사회·문화적 상호 유대를 바탕으로 도전과 기회는 물론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비전과 책임도 공유한다.
- ▲제반 분야에서 이룩해 온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3국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가기로 합의한다.
- ▲향후 개방성, 투명성, 상호 신뢰, 공동 이익, 상대방 문화에 대한 존중 등의 원칙 위에서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추구해 나가고 아세안+3, EAS(동아시아정상회의),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등 지역협력체의 발전에의 기여를 도모한다.
- ▲3국간 협력은 세계 경제 및 금융상황과 관련한 심각한 도전에 대한 대처에도 매우 중요하다.
-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정부 및 민간을 막론하고 포괄적인 협력을 추구할 것을 결의한다.
- ▲이번 정상회의가 역내 평화와 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가능케 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한중일 3국 정상회의의 3국내 개최 정례화 및 내년도 중국 개최를 결정한다.

◇국제금융 및 경제에 관한 공동성명

-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이 직면한 도전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3국간 협력 강화를 필요로 한다.
- ▲금융시장 안정과 세계 경제 성장 회복을 위한 국제회의와의 공조노력 중요성을 강조하고, 워싱턴 G20 세계금융정상선언의 이행 공약을 재확인한다.
- ▲금융시장의 불안정 대응을 위해 지역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 강조한다.



- 워싱턴 개최 3국 재무장관 회의 결과 및 3국간 중앙은행 총재 회의의 정례화 환영한다.
- 3국간 양자 통화스와프협정 확대 결정을 환영하고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 가속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 아시아개발은행(ADB)의 개도국 지원 확대를 위해 자원 확대에 조속히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

▲금융위기가 세계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한다.

- 세계경제의 하향 추세를 반전시키고 지속성장을 회복하기 위한 아시아의 역할을 강화한다.
- 비즈니스 환경개선 액션 어젠다 공표를 환영한다.

▲워싱턴 G20 세계금융정상선언과 리마 APEC 정상선언의 투자와 무역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한다.

- DDA(도하개발어젠다)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3국 정부간 노력을 지속한다.
- 12개월간 신규 무역장벽 도입을 자제하고 수출 제한 조치를 부과하지 않으며 WTO에 합치하지 않는 무역축진 조치를 시행하지 않는다.

▲금융분야 뿐 아니라 실물경제에서의 아시아 국가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성장촉진과 국내수요 확대를 위한 조치의 중요성을 확인한다.
- 아시아가 자체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3국간 협력 강화를 결의한다.

◇한중일 3국협력 증진을 위한 행동계획

▲협력 일반

- 3국내 별도 정상회의 정례 개최(2009년 중국, 2010년 한국)
- 아세안+3 계기 3국 정상회의도 병행 개최
- 3국 외교장관회의 및 차관보회의 정례 개최
- 사이버 사무국(웹사이트) 내년 개설

▲경제·통상

- FTA 민간 공동연구 심화 및 투자협정 체결교섭 가속화
- 비즈니스 환경개선 액션 어젠다 채택
- 에너지 분야에서의 호혜적 협력 지속
- 역내 금융안정을 위한 금융관계 부처 및 중앙은행 등간 협력 지속
- 제3차 한중일 물류장관회의 내년 중국 개최, 산업협력 증진을 위한 3국간 연락체계 구축

▲과학·기술·환경

- 제2차 한중일 과학기술장관회의 내년 일본 개최
- 황사방지에 관한 공동연구, 역내 환경오염 감소를 위한 협력현황 평가



및 공동 대응방안 마련

- 해양쓰레기 방지를 위한 공동노력 증진, 겨울철새 공동조사(내년 1월) 및 고병원성 조류독감 연구 협력 강화

▲사회·문화

- 해남 수색구조 분야 양자간 협력의 3국간 협력체제로 확대 모색
- 제2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내년 중국 개최
- 제2차 한중일 국책연구기관 포럼 내년 중국 개최
- 내년도 중국-일본 청소년 각 100명 방한 초청 및 3국 청소년 우대 카드 도입 논의
- 3국간 전시회, 공연, 영화 등 분야 문화서틀사업 지속 시행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6자회담 과정 추진노력 경주
- 보다 안전한 세계를 만들기 위한 군축·비확산 노력 경주
- 3국 국장급회의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협력 지속
- 대(對)아프리카 정책 대화, 동아시아 지역협력 및 유엔 개혁 등 관련 협력 지속

◇재난관리 협력에 관한 한중일 3국 공동발표문

▲한중일 정상들은 3국간 재난관리 협력 증진의 중요성에 공감한다.

▲3국은 지진·태풍·홍수 등 자연재해의 위협에 항상 노출돼 왔으며 기후 변화와 급격한 도시화 등 환경 변화 속에서 재해의 위협은 증가할 전망이다.

▲3국 정상은 재난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 법안, 우수한 시책, 경험, 과학기술 등 정보 공유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아래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에 합의한다.

- 포괄적 재난관리체제 개발
- 재난 취약성 감소 및 피해 최소화 시스템 개발
- 다양한 수준에서의 재난관리 협력 강화

▲이를 위해 3국은 재난관리 분야 정부 기관장 및 전문가 회의를 순환 개최하고 내년중 일본에서 제1차 회의 개최를 추진한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8/12/13/0503000000AKR2008121305530001.HTML>



[참고 2] <한미 정부, 북핵능력 관련 주요발언> (연합뉴스, 12/11)

(워싱턴=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이후 한·미 양국 정부는 북핵 6자회담을 통해 북한에 모든 핵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북한의 핵능력을 나름대로 분석·평가해왔음.

다음은 주요 발언.

- ▲“북한은 여러 개의 (핵)폭탄을 제조했고, 이란은 핵클럽 가입을 추구하고 있다”(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 포린 어페어즈 2009년 1·2월호 기고문)
- ▲“북한과 이란으로 핵무기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 2008년 12월 1일 차기 미 행정부 외교안보팀 인선 발표 기자회견)
- ▲“일반적으로 북한이 추출한 플루토늄으로 6~8개의 핵무기를 만들었다는 추정이 있는데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인지 확인된 것은 없다”(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2008년 10월 22일, 국정감사 답변)
- ▲“북한이 (핵무기) 6~7개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가진 것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지 없는 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김태영 합참의장, 2008년 10월 8일 국정감사 답변)
- ▲“대화를 하지 않고 있을 때 북한은 핵무기 8개를 개발했고 대화를 시작했을 때 우리(미국)는 핵무기와 핵시스템(핵시설과 프로그램)들을 해체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도달했다”(오바마 당선인, 2008년 7월 23일 미 CBS방송과의 인터뷰)
- ▲“정보당국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해 3~4기의 핵무기를 만드는 데 충분한 무기급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 2008년 3월 11일 미 의회 상원 군사위 청문회 증언)
- ▲“북한의 핵실험 실시는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예전의 평가를 뒷받침하고 있다.(실험에) 앞서 북한은 최소한 핵무기 6개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생산했다”(마이클 매코넬 미 국가정보국장, 2008년 2월 5일 미 의회 상원 정보위 청문회 증언)
- ▲“인도와 파키스탄, 북한이 핵무장국가 클럽에 합류했고, 이란은 (핵클럽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오바마 당선인, 2007년 10월 2일 시카고 유세)

bingsoo@yna.co.kr

출처(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8/12/11/0511000000AKR20081211106900071.HTML>